

1.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무죄추정의 원칙	나. 형사보상청구권
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라. 보석청구권
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3. 실체적 진실발견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소개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 ②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4.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 ② 증거개시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증거개시의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 ④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기타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은 증거개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5.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연인은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② 법인에 대한 형사처분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법인도 형사절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③ 법인체체납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유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열리게 되는 재심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② 수사기관이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자백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에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면, 그러한 자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④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甲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 ②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②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9. 다음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②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공소제기라 할지라도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은 다룰 수 없다.

10.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 ㉡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 ㉢ )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 ① ㉠-절차형성적, ㉡-피고인, ㉢-법률
- ② ㉠-실체형성적, ㉡-법원, ㉢-법률
- ③ ㉠-실체형성적, ㉡-통상인, ㉢-정의
- ④ ㉠-절차형성적, ㉡-통상인, ㉢-정의

11.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②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④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 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12.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행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인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 ③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지 10분 후 범행 현장에 인접한 학교의 운동장에서 신고자가 지정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13.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14.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④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술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5.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제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 ②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주사보가 도시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 甲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다며 甲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乙에게 참고인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여, 자진출석한 乙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甲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여 乙이 나가려 하자, 검사가 乙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16. 다음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구속할 수도 있다. 다만,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공판 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7.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언제나 압수할 수 있다.
- ②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과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과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면 압수한 녹음과일은 乙, 丙의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18.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④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19.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20.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라.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 나.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다.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 라.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마.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더라도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24. 甲과 乙은 특수절도를 공동으로 범한 후 절취한 물건을 그 정을 알고 있는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 乙, 丙은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②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은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③ 丙이 선서 없이 한 진술은 甲과 乙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만일 甲이 먼저 검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2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의신청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으나, 그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동의대상인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26.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법원은 그 수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일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수 없다.
-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27.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기죄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③ 절도죄로 구속되었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28. 범인식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 ③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 ④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인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2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0. 고등학교 친구인 甲과 乙(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음)은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③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31.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 ① 그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그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③ 그 문건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나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④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2.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甲이 ‘피고인 乙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乙의 각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34.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다.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마.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 ③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36.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 ②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 ③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 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파기자판함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송하거나 이송할 수도 있다.

3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은 확정되기 전의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상소와 달리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 ② 재심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전면적 재심제도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이익재심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재심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은 물론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 ④ 재심사유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 등의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3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벌금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재산형의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 ③ 몰수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 ④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④ 즉결심판절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이절차이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인 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전문법칙 및 자백보강의 법칙이 적용된다.

4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를 주된 납세자로 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

③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④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이 파악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③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과세요건 중의 하나인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6.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실질과세원칙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요소이다.

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자료 1]

<div> <div>· 사업년도 2016. 7. 1. ~ 2016. 12. 31.</div> <div>·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div> <div>· 접대비 해당금액 95,000,000원(모두 적격증빙)</div> <div>· 당기 일반수입금액 70,000,000,000원</div> <div>·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음</div> </div>
---

[자료 2]

<수입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0.2%)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0.03%)

- ① 17,000,000원

② 23,000,000원

③ 29,000,000원

④ 41,000,000원
8.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그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 ④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한다.

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④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중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10.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③ 직전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그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의 15%를 당기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 ②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자본납입 또는 출자납입의 일부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법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④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12. 다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③ 대손금에는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포함된다.
- ④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3. 다음 보기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기>

-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해당 채권의 회수 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하거나 감액(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액하거나 감액한 후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 중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 ① 세액감면                      ② 소득공제 및 비과세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④ 세액공제

15.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乙)표에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은?

- ① 접대비 한도초과액                      ②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④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6.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7. 다음 보기 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기>

- ㉠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없는 것은?

-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③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④ 최저한세율



1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④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퇴직한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③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④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다음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2. 다음 보기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

㉡ 타인의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중단되는 경우

㉣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 공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단순분할의 경우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23.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②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한다.
  - ③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소득세법」상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뿐이다.

24.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②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25.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금액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③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다만, 주택임주 지체상금은 제외한다.
26.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 ② 인적공제대상자 판정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 날 또는 치유일 전 날의 상황에 따른다.
  - ③ 기본공제 대상자인 75세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액은 총 450만 원이다.
  - ④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7.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②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③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④ 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의 액면가액
2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자는?
- ①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
  - ②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 ③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④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2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영업용 제외)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회사 업무에 관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④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0.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 ② 기계장치를 2016년 2월 3일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같은 해 5월 3일, 7월 3일, 9월 3일)받기로 한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③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되어야 한다.
  - ④ 재화를 외상판매할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②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 ③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2.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자와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다.)
- ①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②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 ④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것
3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④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못한다.

- ③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3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 ③ 사업자등록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④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
  - ② 3천만 원 상당의 족보와 제구
  -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
  - ④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금액은 20억 원이다.
  - ②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이다.
  -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 ④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38. 「국세징수법」상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④ 압류 후 재산가치가 변동하여 그 재산가치가 징수하여야 할 채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39. 다음 중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③ 법인이 해산한 때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40.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는?
- ① 인지세
  -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 ③ 담배소비세
  - ④ 주세